

일본 대지진 복구사업의 현황과 과제

일본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복구를 위한 기본방침을 책정하는 등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준비를 도모하고 있으나 사업추진의 속도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임. 더구나 인프라 건설 등 복구사업에는 피해지역의 기업과 주민을 우선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서 해외기업의 복구사업 참여에는 많은 장애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일본정부는 부흥기본방침의 골자를 발표

- 2011년 7월 21일, 일본 민주당 정부는 동일본 대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기본방침의 중요 골자를 발표하였음.
- 이번에 발표된 기본방침의 골자는 「부흥구상회의」(정부자문회의)가 제안한 복구방향을 기본으로 하면서 피해지역의 입장과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한 것임.

□ 복구사업의 규모

- 가장 관심을 끄는 복구사업의 규모는 향후 10년간 23조 엔 규모의 복구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임.
- 일본 내각부는 동일본 대지진으로 인한 실물자산의 직접적 피해액만도 16.9조엔에 이른다고 발표한 바 있음.
- 23조엔 중에서 19조엔은 초반 5년간 집중적으로 지출하고 나머지를 후반 5년에 걸쳐 지출한다는 방침임.

- 이번 복구사업규모는 1995년에 발생한 한신 대지진 복구사업규모 (11.6조엔)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규모임.

□ 소요재원 조달방안

- 일본정부는 23조엔 중 약 10조엔은 부흥채를 발행하여 조달하고 나머지는 기존예산의 삭감을 통해 조달한다는 방침임.
- 지난 5월 약 4조 엔 규모의 1차 보정예산을 편성하여 현재 집행 중에 있으며 약 2조 엔 규모의 2차 보정예산이 국회를 통과할 예정이어서 6조 엔 규모의 집행계획은 이미 확정된 상황임.
- 본격적인 복구예산은 제3차 보정예산 이후에 편성될 예정이나 일본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하여 본격적인 예산편성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10억 엔 규모의 부흥채 상환에 소요되는 재원은 증세를 통해 조달할 예정인데 구체적인 증세방안은 아직 합의되지 않았음.
- 재무성을 중심으로 한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등 기간적인 조세를 통해 증세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민주당은 증세에 따른 정치적 부담으로 인하여 아직 명확한 방침을 결정하지 못하고 있음.
- 자민당은 증세에 찬성하는 입장이나 소비세를 통한 증세는 피해 지역 주민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반대하고 있음.

□ 예산집행상황

- 현재까지 복구사업에 대한 예산집행은 매우 지지부진한 상황이며 이런 상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음.
- 예를 들면 제1차 보정예산에는 쓰나미로 인한 잔해 폐기물 처리

에 3,519억 엔을 배정하였으나 현재 집행된 것은 208억 엔(6%)에 불과한 상황임.

- 잔해 폐기물 처리의 예산집행이 늦어지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중앙정부의 적극적 관여 부족, 각종 법규제의 탄력적 운용 능력 부족, 인력과 장비 등 공급능력부족 등을 들 수 있음.
- 향후에는 예산편성(3차 이후)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고 예산이 편성된다 하더라도 각종 규제와 지역기업 선호와 같은 폐쇄적 관행으로 인해 예산집행 자체가 지연될 우려가 있어서 복구수요의 경제적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기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됨.

□ 복구사업 추진을 위한 자금지원 및 규제완화

- 복구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기본방침에서는 자금지원, 규제완화를 주요 지원방안으로 제시하였음.
- 피해지역 지자체의 자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해 일본정부는 지자체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 제도를 새롭게 창설하여 지자체에게 자금지원을 할 방침임.
- 또 하나는 부흥특구를 지정하여 이 지역에 한하여 규제특례를 적용하고 세제, 재정, 금융 등 다양한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임.
- 예를 들면 부흥특구에서는 환경규제, 건축규제, 공장입지규제, 토지이용규제 등을 완화하고 법인세 등을 감면하는 등의 조치가 취해질 가능성이 높음.

□ 구체적인 사업사례

- 토지이용의 신속화를 위해 토지이용과 관련된 성청의 권한을 하

나로 통합하여 규제를 일원화하는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임.

- 권리자 소재가 불분명한 토지를 지자체가 일시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여 토지이용을 촉진한다는 방침임.
- 태양광 발전, 풍력발전 등 재생가능에너지 관련 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피해지역에 집적을 촉진시킨다는 방침임.
- 어업특구를 창설하여 어협이 보유한 어업권을 민간기업에 개방시키고 어업의 기업화, 대규모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임.
- 농업경영을 재건하기 위해 금융지원을 하고 농업의 대규모화, 기업화를 촉진한다는 방침임.

□ 부흥청 신설

- 위와 같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각 성청의 관련 권한과 인재를 새롭게 설치하는 부흥청에 집중시킬 계획임.

□ 일본 복구사업의 향후 전망

- 복구사업이 본격화되기에는 아직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될 전망이다.
 - 중앙정부의 정치적 대립으로 인하여 관련 법률 제정, 예산편성이 어떻게 될 것인지 매우 불투명한 상황임.
 - 피해지역의 상황을 보면 어떤 형태로 지역사회를 복구할 것인지를 놓고 지역주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대립하고 있어서 지역 차원에서도 구체적인 복구계획의 수립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 복구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하더라도 복구사업의 진척속도는 상당히 느리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됨.
- 예를 들면 한신 대지진으로 인한 항만복구에는 5년의 시간이 소요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번 지진피해의 복구가 실제로 완료되는데는 10년 이상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됨.
- 복구사업에의 참여는 피해지역 현지기업과 주민을 우선시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서 해외기업의 복구사업 진출에는 많은 장애요소가 있을 것으로 전망됨.
- 일본의 대형건설업체(예: 카시마 등)조차도 복구사업 참여가 아직 본격화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사업추진의 폐쇄성이 강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 주의해야 함.
- 다만, 복구사업의 규모가 매우 크고 분야 또한 다양한 만큼 우리나라의 관련 업계에서는 복구사업에의 참여 방안을 준비해 둘 필요는 있음.

<참고자료>

日本經濟新聞(2011.7.22 조간).「復興策、総額23兆円」.